

시평

생활·여성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군복무자에게 주는 가산점 제도를 놓고 오는 7일 행정쇄신위원회 본회의가 최종 존폐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쪽에서는 남성들에게만 국방 의무병 제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제대군인들에게 군복무에 대한 일정한 보상을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취업후 호봉산정에서 군복무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고 있는데 채용시험에서까지 그런 혜택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는 두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만약 공무원 7급과 9급이 수행하는 일이 군대경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산점을 주려는 것이라면 그 연관성을 증명하고 명문화하면 된다.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경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밝히고 나아가 시험에 반영될 수 있는 식으로 시험제도를 바꾼다면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행정쇄신위원회 실무회의에서 토론된 바와 같이 이런 논리라면 군대경력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봉사활동 등에 대해서도 공평하게 가산점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삼아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2세 양육의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신경쓰지 못하고 전적으로 개별가족에 맡겨져 왔다. 국가방어에 주력해온 데 비해, 2세 양육과 교육을 매우 소홀히해온 것인데 요즘 그 결과가 여러 가지 끔찍한 사회문제로 터져나오고 있다.

여대생과 교수들의 문제제기로 터져나온 군복무 보상에 관한 논의는 단편적 대응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사회의 방향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미래지향적으로 다루어가야 할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알게 된다. 지금 여러 면에서 전환기에 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원리차원의 논의를 생략하고 편법으로 땀질하며 이어온 파란민적 사회체제를

바꾸어가는 것일 것이다. 너무 오랫동안 정당성이라든가 공평성의 개념은 명분으로서만 존재했던 탓인지 원리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위선적으로 보이게 된 지금, 그 작업은 더욱 어려워 보이지만 피해가서는 안될 것이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뒤 더욱 실리주의가 판을 치는 듯한데, 그것은 아마도 문민정부가 들어서면 공평성의 원리가 살아날 것을 기대하던 이



조혜정

연세대 교수·인류학

군복무자 가산점 논란

만약 지금의 가산제가 단순히 국방의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 제도는 공개경쟁 원리에 위배된다. 실제로 거의 모든 취업영역에 걸쳐 군복무에 관한 한 호봉책정에서 그 보상이 주어져 왔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껏 문제가 된 적이 없다. 원하던 원하지 않든 '건장한' 남자들이 의무적으로 보내야 했던 3년간의 노고를 다수가 인정해 왔기 때문이다.

엄밀하게 평등의 원리를 놓고 따져보면 이 문제는 두가지 차원에서 문제가 된다. 하나는 왜 남자에게만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는지는 차원인데, 이 점에 관한 한 군대에 가고 싶지 않은 남성들은 매우 억울하게 생각해 왔고, 군대에 가고 싶어하는 일부 여성들 또한 억울하게 생각해 온 부분이다. 앞으로 안보개념과 기능이 변하여 국가안보가 더이상 군대조직만으로 수행되기보다는 아주 포괄적이고 일상적인 분야에 걸쳐 수행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 문제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진지하게 거론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에 대한 의무적 복무와 관련되어 논의될 또 하나의 주제는 국민양육에 대한 보상·지원의 문제다. 국방과 훌륭한 국민을 낳아 기르는 것은 한 사회의 운명이 걸린 가장 중요한 과업이고 이른바 '군대국가'의 역사는 이 두 영역에 걸친 활동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자치를 마련하는 것을 중요시

들이 실망하게 되면서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생긴 것이 아닌가 한다. 문민시대가 이루어내야 할 가장 중요한 작업은 바로 원칙이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일 것이다.

열심히 준비를 해 취업전선에 끼어들었는데 공평성의 원리가 지켜지지 않음을 알게 된 이들은 쉽게 사회를 원망하고 불신하게 된다. 우리 사회의 가장 고질적 문제가 바로 '불신'에 있다고 모두들 말해오지 않았는가? 공공적 원리에 대한 신뢰를 심어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다. 작은 것 속에 큰 것이 들어 있고, 공무원 채용시험이 공평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지닌 이러한 근본적 차원에서의 상징성에 있다.

교대와 음대에서 남학생을 많이 입학시키기 위해서 가산점을 주는 나라, 여성들의 교육수준과 경제활동 참여도는 이미 선진국 수준이지만 여성정치인은 전체의 0.9%에 불과하고, 세계 1백10위라는 최하위수준에 머무르는 상황에서 여성정치가를 배출하기 위해 할당제 도입을 거론하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는 지도자들이 많은 나라, 남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산제가 있는 나라에 사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어떤 치열한 경쟁시대가 와도 남자들만으로 너넌하게 삶을 꾸려갈 자신이 있다는 듯한 무모함이, 전 근대적 단일함과 혼란 속의 자포자기만들

44,
10,
2

+